

산업재해 예방 위한 충분한 관심과 지원 필요

공기업 발주처에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돼야



박형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 본부장

충청남도 북서단에 위치한 태안군. 이곳에는 현재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바로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설비와 국내 최대 석탄 화력 발전기 2기가 동시에 건설되는 등 그야말로 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사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박형락 한국서부발전(주) 태안건설본부 본부장은 무엇보다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대규모 국가기반 시설 건설현장인 만큼 그 어떤 가치보다 안전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것이다. 본지는 박형락 본부장을 만나 안전경영 철학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돋보이는 안전경영을 전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곳 현장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책연구과제로 IGCC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국내 최대의 유연탄 발전설비인 1,000 MW급 태안 9, 10호기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하루 출력 인원만 2,000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는 곧 각 도급사 차원의 안전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급사의 안전관리 인력을 풀(pool)로 묶어서 이들로 하여금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우리 태안건설본부 직원들은 2인 1조로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대한산업안전 협회와 함께 '상주안전감리제도'를 운영하면서 다중 안전

점점이 실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주처인 공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건설업 재해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의 원인과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설업의 재해예방 대책을 제시하기 전에 앞서 그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설업에서 재해가 잦은 원인으로 일시적인 사업장이라는 점과 일용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꼽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공기 문제를 더하고 싶습니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안전과 품질을 뒷전에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허겁지겁 나오다가 정작 중요한 서류 등 물품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안전 그리고 품질인데 이를 망각한 것이지요. 제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일정을 뒤로 미루라고 현장소장들에게 수시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공정은 외부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품질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전은 관심과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현장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사업장과는 다른 재해 예방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근로자 본인이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들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법은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회 약자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삼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설업 재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보면 지금과 같은 재해예방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하는 것이지요.

아울러 저는 발주처가 해당 현장에 대해 안전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발주처에는 시공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 공기업 발주처에 대해서는 발주액과는 다른 비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지급하는 것도 재해예방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모두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선 이번엔 얻은 교훈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안전의 습관화, 생활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안전을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11가지 재난재해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 안전체험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상당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 안전을 몸으로 체험하고, 습관화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운영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 안전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